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엇을 남겼나?

---

이 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임연구위원)

자료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브리핑자료입니다.

■ 8월 24일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주민 투표가 끝났다. 투표율이 25.7%라 개표조차 못했다. 주민투표법상(제24조②항)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투표를 개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투표의 핵심 쟁점은 소득하위 50%학생에게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느냐 아니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느냐의 문제였다. 그런데 선거과정을 보면 이런 정책 내용에 대한 찬반 대결이 아니라 투표를 하느냐 않느냐의 흑백논리식 양상으로 전개됐다. 그러다보니 투표율을 가지고 대립구도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민투표는 정책목적과 내용은 숨고 투표를 하느냐 않느냐가 핵심쟁점이 되어버린 이상한 투표였다.

이번 주민투표의 찬반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인가를 곱씹어 보게 된다. 민주사회에서 투표는 국민의 대표를 뽑거나 국민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투표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참정권인 시민의 기본 권리를 망각하는 것이다. 정책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표시

해야 한다. 그런데 내용은 숨어버리고 투표의 참여 여부가 선거쟁점이 되어 버렸다.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표 자체를 “나쁜 투표” 또는 “나쁜 투표장”으로 몰아갔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한 표 한 표가 신성한 행위이다. 이번에 경험한 것처럼 만약에 투표를 부정한다면 무엇으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것인가?

투표장은 신성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곳이다. 그래서 투표장은 신성한 곳이다. 그런데 이를 나쁜 곳으로 매도하는 이런 행위가 과연 옳은 방법인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생각해 봤는지 의심스럽다. 투표거부가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정치적 무관심을 증폭시켜서 정치후퇴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민투표가 끝난 시점에서 투표 거부운동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의도였는지, 언어의 유희는 없었는지도 새겨봐야 한다.

‘무상’이라는 용어도 그러하다. 세상에 ‘무상’이라는 것은 없다. 누군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무상’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특히 정부의 모든 행위는 ‘무상’일 수 없고 이는 직접세나 간접세로 국민이

부담한다. 경제력이 취약한 빈민층이라도 직접세는 안 내더라도 간접세는 부담하고 있다. 오늘을 사는 세대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세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는 미래 세대의 자원을 현재 사람들이 써버림으로서 후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자기가 부담할 몫을 다른 사람이나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부담 없는 복지는 없다. 세입이 정해진 상황에서 지출대상을 확대하면 지원 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넓히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안전망은 더욱 악화된다.

사회보장의 재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대상이 넓어지면 그만큼 조세부담은 많아진다. 조세부담 없는 복지는 기대할 수 없다. 복지는 재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재정의 뒷받침 없는 복지공약은 허구이다. 자기는 부담하지 않고 국가의 도움만 바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투표는 신성한 행위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주민투표에서 보여준 선동적인 “나쁜 투표” 나 ‘나쁜 투표장’으로 투표를 매도하는 정치문화로는 이루어 낼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투표 자체에 대한 불신의 확산은 결국 부메랑처럼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